

'ISD 절충안' 결렬... FTA처리 난항

〈투자자유화소송제도〉

與 외통위 개시에 野 강력 반발... 비준안 상정 무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유화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막판 절충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의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전체회의장 진임을 위해 위원장직에 대기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놓여진 피해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마라톤협상을 통해 놓여진 피해보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논여업 대책에서 야당이 요구한 13개 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발농업·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확대 등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통상절차법은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과 관련, 여야는 미국과 당장 재협상을 하지 않는 대신 한미FTA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해 1년 안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ISD 절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과 다른 야당의 반발로 이날 오후 'ISD 유보 조건부 처리'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ISD 조항을 유보한 채 먼저 비준안을 처리한 뒤 이 부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대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에 대한 재논의 약속을 받아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총 및 지도부-외통위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수용불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안에 대해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손 떴다가 전체를 건드렸던 것처럼 ISD를 건드리면 한미 FTA 협상 전체를 건드리게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31일 회의가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을 성토했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장 인사권 남용 방지 시스템 필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토론회서 주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사청문회 도입에 공감해 이를 제도적 보완을 주장했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 남용·오용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라며 "집행기관의 장이 일반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보다는 이를 견제하는 시스템(인사청문회)을 도입하는 게 지

극히 당연하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그러나 지방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하려면 먼저 특별한 상위법과 관련법 등 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만 속셈이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홍인화 광주시의원은 "집행부는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도덕성, 전문성, 능력 검증에 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덕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의회에서 한 정당이 독식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힘든 한계가 있다"라며 "관련법 개정과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추천위원회 등 청문회에 준하는 제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도 내달 3일 대전시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 등을 검증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등 전국 시도의회가 지방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동식·임영주·고성혁 베스트 간부공무원 전남도청 노조 선정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베스트 간부공무원'을 뽑아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최근 4급 이상 간부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베스트 간부 공무원' 선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노조는 1116명의 노조원 중 691명(62%)이 참가한 1차 투표와 다면평가를 실시, 후보자를 압축한 뒤 다시 896명(81%)이 참여한 2차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에는 주동식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과 임영주 농림식품국장, 고성혁 인력관리과장이 뽑혔다.

5급 공무원은 김영선(세무회계과 계약담당), 김종갑(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 박한주(사회복지과 음식문화담당), 위삼섭(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담당), 최



주동식 본부장 임영주 국장 고성혁 과장

봉현(지역계획과 지역개발담당) 등 5명이 선정됐다. 베스트 간부공무원 선발은 바람직한 간부 공무원상 정립을 통한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도청 노조는 '조직 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관행 또는 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신재생에너지 투자·지원 대폭 확대

정부, 의무공급제도 이행 비용 전기료에 반영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이행 점검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녹색위는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현재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보다 2배 늘릴 예정이다.

이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이행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토록 했다. 또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RPS 이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비율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2%에서 10%로 점차 확대된다. 이행비용(2012년 2895억원 추정)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경우 주택용을 제외한 일부 산업 분야의 요금인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풍력 발전 설비의 설치를 쉽게 하도록 요건을 갖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와 자재운반 등의 제한을 낮추기로 했다.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위탁선거 등에서 선거법 안내 및 감시·단속 활동을 할 상시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광주 11명, 전남 29명(장애인 1명)이며, 모집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다. 선발된 감시단원은 광주·전남 선관위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배치돼 내년 1월2일부터 12월29일까지 상시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지원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각급 선관위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관위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상시 선거부정선거감시단으로 선발되면 단속행정업무 보조, 관할 지역의 선거관련 정보수집, 선거법 안내, 예방활동 등 단속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시단원은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보수는 7만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국무회의 참석

박원순 서울시장의 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지난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내달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국무회의에는 서울시와 관련된 현안이 사실상 없고 서울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발언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11 가을&겨울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미얀마 전문

광주 왕복항공 주중출발 1박2일 골프 4명이상(1조) 출발가능!

1.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홀
 ▶해비치CC 18홀, ▶해비치CC 18홀 **₩299,000**

2.부영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더클래식CC 18홀, ▶부영CC 18홀 **₩329,000**

3.한라산 골프텔 30평 (4인1실) 36홀
 ▶아네틸CC 18홀, ▶한라산CC 18홀 **₩339,000**

4. 관광호텔 (2인1실) 36홀
 ▶제피로스CC 18홀+▶세인트포CC 18홀 **₩349,000**

5.에버리스 골프텔 54평 (4인1실) 45홀
 ▶라운CC 18홀 +▶에버리스CC 27홀 **₩389,000**

6.오션스위츠 호텔 (2인1실) 36홀
 ▶블랙스톤CC 18홀 +▶세인트포CC 18홀 **₩419,000**

♣ 기타 다른골프장 및 숙소 선택 가능합니다. 2박3일 골프투어 및 자유여행, 한라산등반 가능합니다. (요금별도 문의)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숙소, 단독수송차량. ▶ 공통 불포함사항 : 캐디피, 전통카, 식사, 기사팁, 유가할증료 (11월기준 ₩24,200)

**365일 좌석확보
가족여행
자유여행 가능!**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